

물가 관리 방식, 이대로 좋은가

洪 淳 直*

비용 상승 요인이 물가 상승 주도

90년 이후의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됨에 따라 집세와 외식비의 증가율이 둔화되어, 이 부문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율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공산품, 공공요금 등 3 부문은 여전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3년에도 전체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 부문의 기여율은 각각 71.6%, 94.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91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였고

특히 93년에는 냉해와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결국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인건비와 금융 비용 부담 증가, SOC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등 비용 상승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 같은 물가 불안 요인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문의 물가 안정이 금년도 물가 안정에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평가

물가 정책에는 미시적인 정책과 거시적인 정책이 있는데, 미시적인 정책은 대체로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며, 거시적인 정책은 실업 및 경기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이다. 미시적인 정책에는 가격 규제 정책과 경쟁 촉진 정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격 규제¹⁾ 정책중 가격 통제는 판매 가격이나 상한선을 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가격

<표 1> 1993년의 부문별 물가 변동 추이
(%, % 포인트)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변동률	기여도	변동률	기여도
전 체	5.80		1.96	
농축수산물	9.8	1.79	10.8	1.12
공 산 품	3.8	1.26	0.8	0.57
공공 요금	6.9	1.10	3.2	1.20
집 세	4.7	0.59	-	-
개인서비스	6.2	0.99	-	-
외 식 비	4.7	0.3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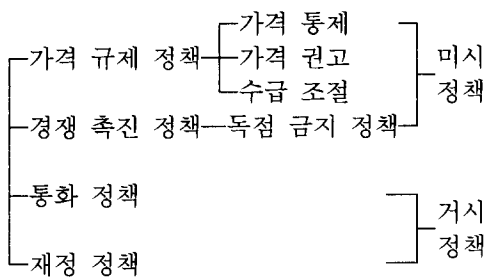
주: 기간 말 기준

*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론경제 전공.

1) 가격 규제는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 여건하에서 정부가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통칭한다. 그 목적은 미시 경제적으로는 독과점적 가격 설정을 방지하여 독점적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거시 경제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최정표, "가격 규제의 실태와 과제," 「전경련」, 1993. pp. 28~35)

규제의 방법으로 최고 가격 지정이나 공공요금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격 권고는 판매자에게 가능한 한 적정 가격으로의 판매할 것은 권고하는 것으로 정부는 시장 지배적 품목에 대해 세무 조사, 행정 지도와 같은 부수적인 압력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표 2> 물가 정책의 분류



가격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물가 정책

문민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정부는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가격 기능의 회복을 통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필두로 도처에서 분출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물가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그만큼 물가 안정이 산업 평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속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94년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통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고 균형 예산하에 공공 사업의 조기 집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공공요금 조정

시기의 연중 분산, 주요 생필품 가격의 특별 관리, 부족한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 공정거래법의 강화로 공산품 가격 인상 업체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 각종 행정 지도를 통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 관련 법률로서 2 개의 일반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있으며, 개별법에는 157 개의 관련법과 시행령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종 관리 지침과 운영 방안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²⁾

그러나 수입 확대 정책과 총수요 억제를 위한 재정·금융 정책을 제외하고는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단편적인 물가 정책이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 정책은 인상 요인을 잠복·누적시키거나 가격 규제에 대한 폐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에 불과할 뿐 결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복지 및 효용 증대를 위한 가격 규제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정력에 의한 가격 관리는 신상품 출시, 용량 조절, 비가격 거래 조건의 악화 등을 통한 우회적인 편법 인상으로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와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격 규제를 통한 물가 안정은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데,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음주 다음 날의 숙취로 고생하는 것처럼 가격 규제는 장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자원 배분

2) 이송철·홍성종, 「한국의 가격 규제」, 규제 연구 시리즈 7,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12. PP. 241~373.

의 왜곡과 경제 주체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거시 경제 정책 위주의 선진국 물가 정책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물가는 매우 중요한 경제 관리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물가가 높이 상승한 80년대 초반부터 공통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중심 수단과 다소 신축적인 재정 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일관성있는 거시 경제 정책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운용하였으며, 미시 경제 정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³⁾ 그러나, 미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가격 통제나 가격 권고 정책 보다는 수입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정책과 독과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 안정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들은 일관된 정책의 집행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물가를 다소 안정시켰으나, 미국·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과 일본간에는 실업과 경기면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통화 긴축으로 인한 실질 금리의 급등(1981~85)은 달러화의 평가 절상을 초래하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 확대에 의해 실업률은 증가되었다. 프랑스도 긴축 통화 정책과 함께 생산물 시장에서 82년 6월부터 4 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품 가격과 임금을 동결하고 86년말까지 서비스 요금을 동결하는 강제적 소득 정책(imperative income policy)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고금리와 설비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공산품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3) 김치호, 「디스인플레이션: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금융 경제 연구 제65호,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소, 1993. 12.

그러나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 자간의 협조적 유대 관계와 탄력적인 고용 조정 방식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업을 증가와 경기 부진 등 물가 안정 정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⁴⁾

이와 같이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간에도 그 당시의 금리와 노동 구조의 차이로 인해 물가 안정 정책의 효과가 상이하었다는 것은, 안정속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긴축 정책의 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 경쟁을 통한 공정 가격 유도가 바람직한 물가 정책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고금리-고임금-고지가-高물류비용 등 생산 요소 측면에서 비경쟁적 경제 여건에 처해 있다. 개방화·국제화로 인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적정 이윤이 보

4) 일본도 물가 안정을 위해 미시적으로는 수입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국내외 가격차 해소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해 공정거래법과 독점금지법 등을 이용하여 경쟁 촉진, 신규 진입의 용이화, 소비자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구매 의식 개혁 등을 실시하고 있다.(日本銀行物價研究會編, 「物價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92. 9. pp. 151~172)

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때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현실화가 뒤따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제품 질의 저하나 편법 인상,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활동이 아닌 부동산 매입과 같은 자산 증식을 통해 이익 감소를 보전할 수도 있다. 인건비와 금융 비용, 원자재價와 환율 변화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 물류 비용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억제에 위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 정책은 경영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 독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가격 자율화를 통한 시장 기능의 회복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물가 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국내 시장도 점차 경쟁적 구조로 전환될 것이므로 가격 규제를 통한 정부의 직접 규제 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개방하의 물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규제보다 공정 경쟁의 여건 조성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 경쟁을 통한 공정 가격의 유도·촉진만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요소 가격의 국제 수준 유도 요망

최근의 물가 상승이 대부분 비용 상승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 요소 가격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있다. 따라서 안정속에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의 경쟁은 물론 해외 기업과도 자유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 요소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물론 이들 생산 요소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당장 인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금리 측면에서 생산-유통-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층에게 외화 대출 활성화와 해외 증권 발행 한도의 확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국내외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 비용 절감에 있어서 주요 간척지나 매립지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개발후 다양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한편, 분양 대금의 장기 분할 납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공업 단지 입주 비용 부담도 줄여 주어야 한다.

임금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 소득세를 인하는 한편, 단순 생산직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및 고용 계약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소비 주체로서 국내 시장 개방으로 국경없는 소비 시대에 먼저 접하여 외제 선호 경향에 의한 과소비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고, 동시에 생산의 주체로서 임금 인상 요구보다는 자기 개발과 성취를 통한 분배 몫을 키우는 데에 노력함으로써 국경없는 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도 국제 경쟁 시대에 품질과 기술이 천하대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가 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상품 가격 인상보다는 적절한 이윤하에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발로 소비자 효용 증대를 통한 더 많은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